



즉시 배포용: 2024년 9월 24일

KATHY HOCHUL 주지사

**CUNY의 반유대주의 및 차별금지 정책에 대해 판사 JONATHAN LIPPMAN이 내린
평가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 성명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는 Lippman 판사에게
CUNY의 반유대주의 및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종합 검토 요청**

Hochul 주지사가 받은 보고서 전문 확인은 [여기](#)

“주지사로서 제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것이며, 바로 지금 우리 칼리지와 대학의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혐오나 반유대주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거주하며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0월 7일 발생한 끔찍한 테러 사건 이전에도 뉴욕은 적극적으로 혐오에 맞서 싸웠습니다. 미국 최초로 주 전역에서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고 혐오로 인한 폭력 위협에 노출된 기관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석법을 개정했고 추가 주정부 인력을 FBI 산하 합동 테러 태스크포스(Joint Terrorism Task Force)에 파견했습니다. 10월 7일 비극적 사건의 추모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 투입을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시립 대학(CUNY)의 반유대주의 및 차별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Jonathan Lippman 판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캠퍼스 내 혐오가 작년 전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할 최선의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Lippman 판사의 보고서를 살펴본 후, 저는 CUNY에 판사가 제시한 권고안 13개를 실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사고에 예방 및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CUNY가 이러한 권고안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학 당국은 이미 판사가 발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저는 뉴욕주 모든 칼리지와 대학에 Lippman 판사의 권고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캠퍼스 커뮤니티가 신앙과 배경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을 안전하게 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Lippman 판사에게](#) CUNY의 반유대주의 및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임무를 지난 10월 맡겼습니다. 당시 하마스 테러 공격의 여파로 혐오와 편견으로 인한 사건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Lippman 판사는 CUNY가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캠퍼스 내 기타 차별과 혐오에 즉각 대응하고 유대인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13개 액션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 대학 전반을 관리하는 센터를 신설하여 반유대주의 및 기타 혐오에 대응하고 내부 반유대주의 및 혐오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등 차별 대응 노력 집중화.
- 개인이 쉽게 반유대주의 및 차별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CUNY 대학 차별 및 기타 보고 포털 개혁.
- 중앙화된 Victim's Advocate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반유대주의 및 차별 피해자들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지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
- CUNY 캠퍼스 내에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법 집행 기관 및 보안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표준 안전 프로토콜 신설.
- 캠퍼스 다양성 책임자 및 기타 반유대주의 및 차별 혐의 조사 책임자에게 훈련 및 지침을 제공하고 조사 감독 시스템 마련.
-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Alliance, IHRA)의 정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2022년 Hochul 주지사 선언에 따라 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 및 원칙을 도입하여 반유대주의 사안을 판단.
- 캠퍼스 운영진 및 선임 다양성 관리관을 포함한 CUNY 구성원 모두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사건 발생 시 반유대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접어두고 현행법을 지침으로 적극 활용.
- 소셜미디어 사용,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정책 교육, 향후 정책이 낙후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정 실시 등 반유대주의 및 기타 혐오 사건 대응에 현행 정책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분명한 지침 제시.
- 분명한 프로토콜을 새롭게 만들어 CUNY 정책 및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발생시 위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일관된 방식으로 제재.
-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캠퍼스 내 표현 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 행위 종합 정책(Comprehensive Policy on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ve Conduct) 초안 작성 및 실행.
- 현행법이나 CUNY 정책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임원진이 모범을 보여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기타 모든 형태의 혐오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 포용, 건설적 대화, 관용 등에 대해 교직원에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노력 지속.
-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 장려 및-합동 프로그램 추가 개설.

Lippman 판사의 검토 결과 및 권고안 전문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